

민주 “與, 대통령 보위하다 함께 몰락”... 특검 이탈표 압박

다음달 10일로 재표결 늦춰...국힘 ‘계시판 내용’ 극대화 시점 겨냥
내달초 검사탄핵안 보고→국조 계획서 의결→특검법 재의결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춰 내달 10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것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계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용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에 대한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쥘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계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거주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서서,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약 2주 늦은 내달 10일로 미루기로 하고 여당과 이

를 합의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계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한 만큼, 내달 4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2일 본회의에서 검사탄핵안 보고, 4일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로 실 틈 없는 파상공세를 벌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 있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원 계시판 논란’으로 내용을 겪는 상황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재의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서태 아닌 필수

“경북에도 의대 신설하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강명구 의원실, 안동대 등이 주최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민생 정책 드라이브 ‘시동’

지역 격차 해소·노동 약자 지원 부각...초선모임 참석 등 현장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간 화력을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한걸음 비켜나 정책으로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을 부각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

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의 국민 보호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곤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어른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유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공정한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의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적·논리적으로 맞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끼워서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찰 특활비 삭감

예결위, 쟁점 예산 심사 대거 보류...1차 감액심사 마무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었지만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100만원, 경찰청 31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또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수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000만원), 정부 예비비(4조

8000억원)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